

WEEKLY CLIMATE REPORT

탄소중립&기후변화 국제동향



7.24~8.7. 주요 동향

- 0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 (8.7)
- 02 (미국) 미국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 (7.27.)
- 03 (세계) UN,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부과 필요 (8.3.)
- 04 (독일) 독일 원전 지속 가동 여부 논의 (8.1)
- 05 (중국) 탄소 집약적 7개 산업 분야 '30년 이후 배출 감축 지시 (8.1.)
- 06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후적응 계획 발표 (8.3.)

0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¹⁾²⁾ (8.7)

- 1년간의 긴 협상 끝에 바이든 행정부의 4,330억 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미국 상원을 통과

※ '21년 11월 하원을 통과한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을 대체할 법안으로 오랜 협상 끝에 상당 부분 축소된 조정안 마련. 최소 법인세 15%를 도입하여 예산 대부분을 확보할 예정

- IRA는 향후 10년간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정책과 전기차 지원금 등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그 외 메디케어 확대 보장 및 의약품 가격 인하 등에 64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IRA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조치

- (청정에너지) 향후 10년간 풍력 터빈 및 태양광 패널 생산, 배터리, 지열발전소, 첨단원자로 지원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생산보조금 600억 달러
- (메탄세) △화석연료 기업에 '24년 연방 배출 기준 초과 시 톤당 900달러, '26년 1,500달러로 확대 부과, △공공토지·수역 시추 시 메탄 로열티 부과, △EPA 메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투자
- (CCS 세액공제) 톤당 50달러→85달러로 확대
- (환경정의) △소외된 지역사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ational Green Bank'에 270억 달러, △ZEV, 고속도로 배출 저감, 버스정류장 및 기타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저소득·유색인종 지역사회 지원에 600억 달러 투입
- (농업) 농업 부문 배출 감축을 위해 200억 달러 투자
- (에너지효율화)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건물 개보수 및 고효율에너지 가전제품 구입에 90억 달러 리베이트 제공
- (ZEV) '32년까지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 보조금 지급
- (산업지원)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제조업에 100억 달러 지원
- (가뭄 대응) 콜로라도강 보존 및 서부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400억 달러 투자

-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으로 하원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본 기후패키지로 '30년까지 '05년 대비 약 31%~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로디움그룹 분석)

02

(미국) 미국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 3)4)5)6) (7.27)

- (기후 재난 대비 예산 지원) 급증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21년 대비 2배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22년 10월부터 각종 기후재난 대비 프로그램에 23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발표

1) Financial Times, US Senate passes Joe Biden's Flagship economic package (8.8.)

2) Vox, The Senate just passed one of the biggest bills to fight climate change, ever (8.7.)

3) Reuters, Exclusive: Biden EPA to tackle coal industry carbon with rules on other pollutants (7.30)

4) The Hill, Energy Department gives major loan to facility for processing electric vehicle materials (7.27)

5) The Hill,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initiatives to boost solar energy use (7.27)

6) AP News, Harris cites climate 'crisis,' pushes \$1B for floods, storms (8.2)

-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 기금과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복원력 있는 기반 시설 및 커뮤니티 구축(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BRIC)'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할 예정
- (EPA의 오염배출 규제 강화 계획) EPA는 연방대법원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권한 제한 판결 이후 오존 배출 규제를 위해 국가 대기질 표준을 강화하고 석탄재(coal ash)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의 배출 규제를 통해 규제 준수에 따른 운영 비용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 유도 계획
- (에너지부의 전기차 배터리 처리시설 확장) 미국 에너지부는 루이지애나 주에 위치한 시라 테크놀로지(Syrah Technologies)가 소유한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처리시설 확장에 1.2억 달러 대출을 승인
 - 본 대출을 통해 '40년까지 약 250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정 운송수단의 보급 확대로 총 9억 700만 갤런의 휘발유 사용을 감축하고 미국 전기차 산업과 첨단 배터리 제조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태양광 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을 발표
 - 주택도시개발부(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총 450만 가구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고 연간 10%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주택 거주자의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개선 이니셔티브를 발표
 - 또한,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워싱턴DC에서 저소득층에 주정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를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03

(세계) UN,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부과 필요⁷⁾ (8.3.)

-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석유·가스 기업의 기록적인 이윤을 부도덕한 이익이라고 비난하며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촉구
 - 대표적인 석유기업인 BP는 '22년 2분기 약 7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화석연료 에너지 업계의 '22년 1분기 이익은 1,000억 달러에 달함
 - UN은 각국 정부가 이러한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확보한 자금을 운송 및 에너지 가격 폭등, 식량 위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제안
 - 사무총장은 횡재세 부과와 더불어 각국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7) The Guardian, 'Grotesque greed': immoral fossil fuel profits must be taxed, says UN chief (8.3)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회·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재촉구

04

(독일) 독일 원전 지속 가동 여부 논의⁸⁾⁹⁾¹⁰⁾ (8.1.)

-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2년 말로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던 독일의 마지막 3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장에 대한 논의 개시
 -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ord Stream 1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평시 대비 20%로 축소
-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의 약 1/3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연료 수급에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여 겨울철 난방 에너지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16%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 중
- 정부는 이미 휴면 상태였던 석탄발전소 10기와 석유발전소 6기의 재가동을 허가했으며, '22년 11월 폐쇄 예정이었던 석탄발전소 11기의 운영 연장 여부와 휴면 상태인 갈탄 화력발전소의 재가동 가능성도 검토 예정

05

(중국) 탄소 집약적 7개 산업분야 '30년 이후 배출 감축 지시¹¹⁾ (8.1.)

- 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공동 계획 발표를 통해 중국 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배출 산업에 감축 지시
 - 철강, 건축자재, 석유화학, 비철금속, 소비재, 장비 제조 및 전자 등 7개 산업 분야에서 연간 매출이 2,000만 위안(29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25년까지 '20년 에너지 소비 수준 대비 13.5%를 감축하고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요구
 - 국내 총 탄소 배출량 중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 부문의 경우 '25년까지 연간 1억 8,000만 톤의 고철 및 철강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30년까지 배출량 감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
 - 또한, 현재 발전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 범위를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계획
- 공업정보부는 작년 12월 '25년까지 탄소 배출량 18% 및 에너지 사용 13.5%를

8) Bloomberg, Germany Has Three Months to Save Itself From a Winter Gas Crisis (8.1)

9) AP News, Germany argues over nuclear shutdown amid gas supply worries (8.1)

10) Politico, Scholz: Extending life of German nuclear plants might 'make sense' (8.3)

11)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releases plan to guide carbon-intensive industries to reach peak emissions by 2030 (8.1)

감축하고 환경 부문의 경제 생산량 11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 그린화 발전 14.5(제14차 5개년, '21~'25년) 계획’을 既 발표

* 공업 분야 친환경표준 및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친환경 상품 장려 및 무배출차량, 스마트가전, 친환경 상품 등에서 부가가치 창출

- 알루미늄 부문은 '25년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한 후 배출 감축을 통해 '40년에는 '30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철강 부문도 '25년에 배출량 정점 도달 이후 '30년까지 정점 대비 30%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06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후적응 계획 발표¹²⁾ (8.3.)

- 해수면 상승과 폭풍우 증가에 따라 해안가 주택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저지대 주택 및 건물 재배치 계획을 포함하는 뉴질랜드 최초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을 발표
 - 본 6개년 NAP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있는 해안가 주택 7만 채의 재배치 계획과 보험료 및 주택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계획적 재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방파제 설치 및 지주(stilt) 위 건물 건설 등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예정
 - NAP에는 이주 비용 마련 및 분담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주택 소유자, 보험사, 은행, 지방 의회 및 중앙 정부가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언급

12) Bloomberg, New Zealand Climate Plan Includes Relocating Some Homes (8.3)